

각국의 의약 분업안 비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우리도 건강 선진국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서게 된다. 그동안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약을 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의사와 약사 두 명의 전문가에게 두 번 받는 건강의 안전벨트를 하나 갖게 된다.

그러나 의료 기관과 약국을 두번 거쳐야 하므로 불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과연 그렇게 불편한 제도일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약분업은 이미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까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1231년부터 이미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 유학을 다녀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 불편하고 어색했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익숙하지 않았고, 주는 약의 양도 우리 나라보다 훨씬 적어 적응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고, 막상 익숙해지니 그리 불편한 제도는 아니라고 느껴졌다고 한다. 또한 약을 점점 더 강한 약을 먹어야만 약효를 볼 수 있었던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우리 나라도 빨리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의약분업은 불편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관습이다. 아래에서는 선진국의 의약분업 사례를 표로 살펴보고 우리의 의약분업 시행 인이 가지는 장점

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에서 살펴보듯이 법체계가 엄격하고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의약분업이 법에 뚜렷이 명시되어

실시되고 있다. 반면 관습법을 주로 따르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의약분업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과 의료 보험 제도에 의해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1년부터로 시작 - 분업 강제화(의사의 조제 금지를 명문화) - 의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약은 샘플 약만 무상일 경우에 한해 허용 - 약국이 없는 경우에만 의사가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에도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만 약을 팔 수 있고 일반 약품 판매는 금지 됨)
	의약품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약 : 처방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 약국약 :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 자유 판매약 : 약국 이외의 소매점에서도 판매 가능한 의약품
▶ 40	처방전 기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 일반명 모두 처방 가능 - 그러나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는 추세(경제적 유인을 줍으로써) -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중 ‘대체 가능’이라고 허락한 경우에는 약사의 판단 하에 상품명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제 포함 - 주사를 투여하는 nurse's clinic이 간호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한 가지의 직능 만을 백하도록 되어 있음 - 단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사에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됨
▶ 41	의약품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약 stupefants : 마약제제 - 처방약 List I : 처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반복 투약할 수 없는 의약품 - 처방약 List II : 환자의 요청에 있을 경우 두 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비 처방약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한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약은 없음
	처방전 기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명, 상품명 모두 처방 가능 - 일반명 처방을 억제, 상품명 처방을 권장하는 추세 - 상품명 처방에 대해서는 약사의 대체를 금지 -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수정·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도 금지

영 국 일 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 분업 국가는 아니지만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에만 약값을 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한해 주민이 의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음
	의약품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약, 약국약, 자유 판매약
처방전 기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 일반명 모두 처방 가능 - 상품명으로 처방할 경우 약사의 대체 금지됨 - 그러나 NHS 등을 통하여 경제적 유인으로 일반명 처방을 권장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로 체계가 다름 - 의사의 조제 금지 조항은 39개 주에서 명문화시키지 않고 있어 의사도 조제, 투약할 수 있음 - 그러나 Medicare(노령층 의료보험),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험), 사 보험에서 의사의 조제나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전 의약분업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약사의 처방전은 주에 따라 다름 - 플로리다 주의 경우 17개 범위의 처방 약에 한해 약사의 처방전을 허용 - 7개 주에서 의사와 합의한 Protocol내에서 처방을 허용하는 종속적 처방권을, 3개 주에서 부분 종속적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음 - 그 외에는 약사의 처방권을 인저하지 않음
의약품 분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약 : 약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 - 비 처방약(OTC) : 약국 및 약국 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
	처방전 기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명, 상품명 모두 처방 가능 - 그러나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음 -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했을 경우,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조제 하라(Dispense as written)”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 조제 가능 - 13개 주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약사의 대체 조제를 의무화 했고 38개 주에서는 약사의 대체 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분업의 형태(원의 처방전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환자가 결정함) - 정부와 약사회회의 노력으로 점차 분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93년 통계치 약 13%) - 의사의 직접 조제보다는 원의 처방전 발행이 더 높은 수익을 얻도록 수가 조정 - 복약 지도료를 책정하여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약력에 따라 복약 지도한 경우에는 복약 지도료를 지급. 그 외 의약품 복약 지도 매뉴얼 등을 통해 약국의 의약분업 수용을 지원 - 의약분업 시범 사업 지역 지정 등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약분업 촉진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 	
	의약품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

있다.
우리의 의약 분업 안은 독일이나 프랑스 안과 흡사한 것으로, 우리의 법 체계가 성문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나라에서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의료비 축면에서 볼 때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여려 가지 경제적 유인을 두어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의약품 분류는 보통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되는데 공정한 의약품 분류는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시항이다.

우리 나라 의약품 분류 현황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비율 품목 수 기준으로 6개 4로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 또한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약국 외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을 구분하여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약국 외 슈퍼 등의 장소에서 간단한 일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그리고 이와 함께 실시되는 의약품 유통 개혁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선진국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당연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습관과 문화로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약간의 불편은 침는 선진 국민다운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 7